

<별첨>

□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요지

- 2010년 10월 19일~11월 24일까지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 그룹 등 국민 3천8백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도시민 1,500명, 농업인 816명, 전문가 64명이 참여한 유효 조사표 2,380건을 확보하여 분석하였음.
-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업인과 전문가는 우편과 이메일을 활용하여 조사하였음.
-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농촌가치 인식과 의식변화, 농업정책 수요,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한 의식과 소비패턴 변화, 주거환경과 복지에 대한 인식 등임.

1)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정책 수요

-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을 종합하면, '우리농업 발전가능성 크다'는 응답은 4년전 비해 17.6%p 증가한 53.4%,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응답은 2007년 35.2%→2010년 47.6%로 12.4%p 증가하였음. 하지만 이와함께 농업투자 축소에 동의하는 비율도 해마다 상승해 2007년 16.0%→2010년 30.0%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실리적인 측면의 관점을 엿볼 수 있음.

<농업·농촌관련 의견들에 대한 동의 비율(도시민)>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업·농촌체험을 포함시켜야 한다	73.9	73.9	87.4	80.9
농업이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79.1	85.9	82.9	71.2
자녀가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45.7	47.9	43.4	40.9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	79.1	83.0	79.7	80.5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35.8	40.4	50.2	53.4
우리나라 농업이 국제경쟁력이 있다	35.2	39.0	46.3	47.6
농산물 가격이 공산품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	63.0	68.6	71.3	66.5
우리 농산물은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	86.5	86.7	88.5	83.7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투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	16.0	18.2	22.4	30.0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49.5	54.2	52.3	53.3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소득을 보상에 주어야 한다	77.7	82.1	79.5	80.1
농업이 축소되면 '농업의 식량안보 기능'도 약해질 것이다	-	92.6	88.4	80.1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농지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	-	61.1	65.6
농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형 위주의 농업생산을 유도해야 한다	-	-	77.3	70.5

- 도시민 88.4%가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반면, 도시민 40.0%만 농업·농촌문제가 나와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평소 농업정책에 관심있다는 응답은 10명중 3명(30.7%)에 그치고 있어 관심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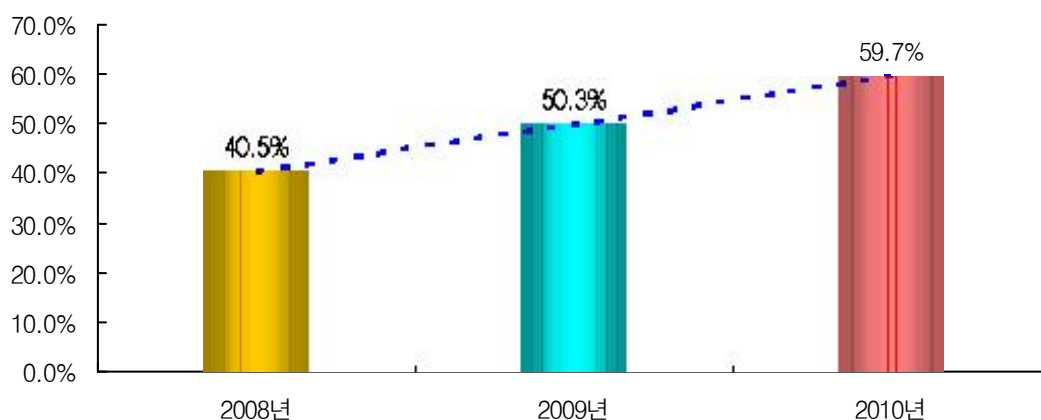
<도시민의 농업정책과 농업·농촌문제 관심도>

단위: %

		관심층	보통층	무관심층			관심층	보통층	무관심층
전체		30.7	37.1	32.3	전체		30.7	37.1	32.3
성 별	남자	33.3	37.5	29.2	소 득 별	150만원 미만	42.6	34.8	22.6
	여자	28.1	36.7	35.2		150~250만원	40.2	32.1	27.7
연 령 별	19~29세	11.7	34.5	53.8		250~350만원	29.6	36.9	33.5
	30대	20.7	42.4	36.8		350~450만원	25.5	39.0	35.6
	40대	36.9	39.9	23.2		450만원 이상	26.5	39.3	34.2
	50대	38.5	33.8	27.7	직 업 별	자영업	39.7	33.3	27.0
	60세 이상	46.4	33.3	20.3		블루칼라	29.8	37.2	32.9
지 역	특/광역시	33.0	37.4	29.7		화이트칼라	26.2	40.5	33.2
	중소도시	28.7	36.8	34.5		전업주부	30.7	37.2	32.1
학 력 별	중졸 이하	47.8	27.5	24.7		학생	10.3	37.1	52.6
	고졸	31.1	36.7	32.1		무직/기타	47.9	33.3	18.8
	대재 이상	22.4	41.7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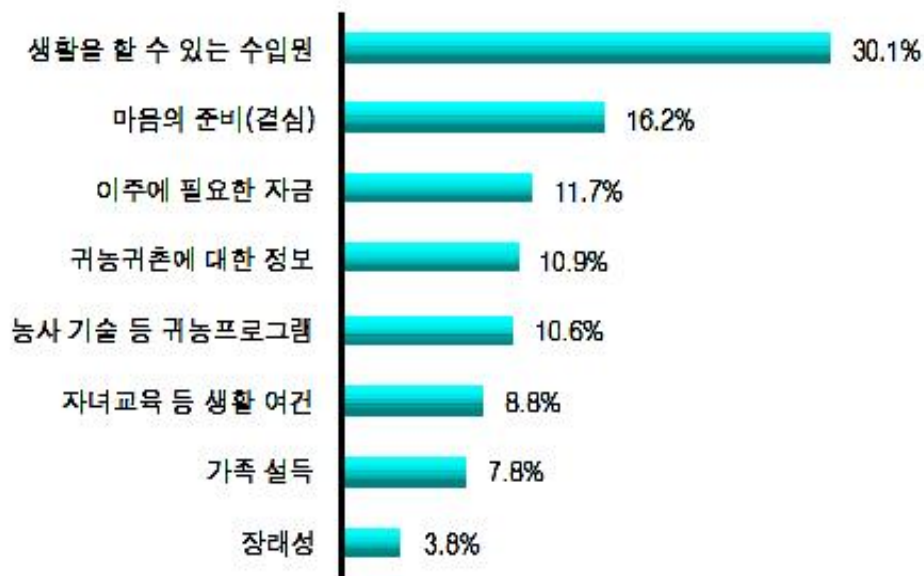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응답은 55.9%로 감소 추세이며 (2008년 63.5%, 2009년 58.6%)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세금 추가부담은 59.7%가 찬성하여 2008년 조사결과보다 19.2%p 증가함.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 위한 세금 추가부담 찬성(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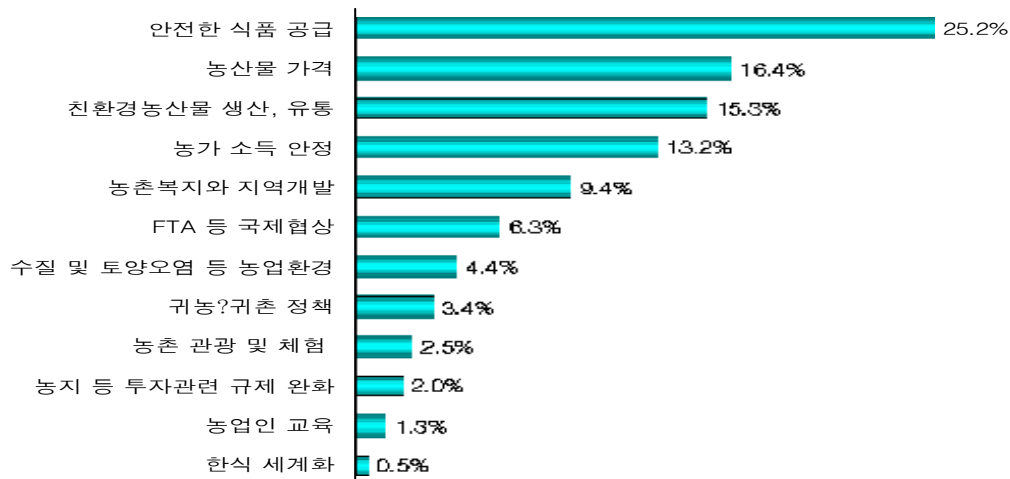
-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되면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의향을 가진 도시민은 2006년 71.3%에서 매년 줄어 이번 조사에서 47.7%로 나타나 귀농귀촌 의향이 감소하는 원인 분석이 필요
- 귀농·귀촌 시 필요한 사항으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30.1%)이 가장 많아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고, 다음으로 ‘마음의 준비’(16.2%), ‘이주에 필요한 자금’(11.7%), ‘귀농 귀촌에 대한 정보’(10.9%) 등의 순이었음.

<귀농귀촌에 필요한 조건>



- 도시민은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과 ‘농산물 가격’, ‘친환경 농산물 생산공급’을 꼽아 농산물 소비자로서의 관심에 집중하고 있음.
- 반면, ‘한식세계화’, ‘농지규제완화’, ‘농촌관광’, ‘귀농·귀촌정책’, ‘농업·농촌환경’ 등 먹거리 이외에도 도시민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분야는 관심도가 낮았음.

<도시민의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 분야>



- 도시민 중 지난 1년간 농촌관광을 1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21.7%에 그쳤으며, 이중 53.2%가 농촌관광에 만족했다고 응답하여 2007년 조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냄. 불만족 요인으로는 '숙박과 취사불편'(28.3%), '체험활동부족'(21.5%)순으로 꼽았음.

<농촌관광의 만족도(도시민)>

단위: %(명)

구 분	2007년	2010년
매우 만족	5.0(16)	1.2(4)
대체로 만족	40.9(131)	52.0(169)
보통	43.4(139)	40.0(130)
대체로 불만	9.1(29)	6.2(20)
매우 불만	1.6(5)	0.5(2)
합계	100.0(320)	100.0(325)

- 체험하고 싶은 농촌활동은 '주말농장'(26.6%), '테마마을 체험'(20.4%), '지역축제'(19.8%)로 나타남.

- 도시민들은 국산 농·축산물 5개 품목의 수입산 대비 가격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쟁력에 대해, '한우' 경쟁력이 7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쌀'(75.8%), '돼지고'

가(68.0%), '과일'(61.6%) 순이었으며, '화훼'의 경우 45.9%로 항목 중 가장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국산농축산물의 경쟁력 인식 정도>

단위: %(명)

문항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보통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다
쌀		25.7(385)	50.1(752)	16.5(247)	6.9(103)	0.9(13)
축산물	한우	39.5(593)	39.3(590)	14.9(224)	5.1(76)	1.1(17)
	돼지고기	20.3(304)	47.7(716)	25.2(378)	5.9(88)	0.9(14)
과일		14.9(223)	46.7(701)	29.9(448)	7.6(114)	0.9(14)
화훼		10.7(160)	35.2(528)	38.4(576)	13.3(200)	2.4(36)

- 도시민들은 식품별 구매 및 외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 채소는 '안전성'을, 육류와 곡물은 '원산지'를 꼽았으며, 과일과 외식의 경우 '품질(맛)'을 꼽은 의견이 각각 54.9%,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우선 고려하는 점(도시민)>

단위: %

품목	가격	안전성	품질(맛)	브랜드	원산지	영양
가. 채소	12.6	37.3	29.1	2.4	16.0	2.7
나. 육류	6.1	27.1	29.6	5.8	30.8	0.6
다. 곡물	8.7	22.7	29.4	7.1	30.9	1.3
라. 과일	5.7	18.9	54.9	4.9	13.3	2.3
마. 수산물	5.1	26.5	32.0	4.0	29.2	3.3
바. 외식	14.4	17.1	46.5	10.1	4.9	7.1

2)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평가와 수요

- 2010년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전문가 공통으로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를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쌀 재고문제', '농산물 수급', '협동조합 개혁' 분야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분야로 평가

<2010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조치에 대한 평가>

문항	성과가 있음		그저 그렇다		성과가 없음	
	농업인	전문가	농업인	전문가	농업인	전문가
농업협동조합 개혁	19.5	10.9	33.5	34.4	35.3	54.6
쌀 재고 증가 및 가격하락 대책	5.5	9.4	16.4	25.0	67.0	65.6
한-미, 한-중, 한-EU FTA 대응	15.1	17.2	36.8	46.9	34.9	35.9
한식 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	30.3	46.9	37.6	39.1	18.9	14.1
해외 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 확보	13.4	14.1	45.2	46.9	27.6	39.1
농식품 수출 확대	27.0	37.5	32.8	43.7	26.7	18.6
농산물 수급(채소류)안정 대책	13.4	7.8	23.5	39.1	50.7	53.1

- 2011년 가장 중점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으로 농업인과 전문가는 ‘소득안정’, ‘유통개혁’을 공통으로 꼽았으며, 이밖에 ‘쌀산업종합대책’과 ‘FTA 대응’, ‘농협개혁’ 등을 주문함.

<2011년 정부가 가장 중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중복)>

구 분	농업인	전문가
쌀산업 종합대책	18.1(288)	9.4(12)
한-EU, 한-중 FTA 대응	8.7(139)	18.1(23)
유통개혁 등 농산물값 안정대책	25.0(397)	21.3(27)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	28.4(451)	22.8(29)
농업협동조합 개혁 마무리	6.7(107)	11.0(14)
농어촌 복지 확대	6.0(95)	5.5(7)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2.4(38)	3.9(5)
귀농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2.2(35)	4.7(6)
한식 세계화 등 식품정책	1.8(28)	1.6(2)
해외농업 개발	0.6(9)	1.6(2)
기타	0.1(2)	1.6(2)
합계	100.0(1,589)	100.0(127)

- 중장기 농업·농촌 유지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도시민과 농업인이 ‘농가 소득 안정’(각 43.8%, 53.8%)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각 14.3%, 12.3%)을 꼽은 반면, 전문가 그룹은 ‘후계농업인 육성’(25.0%)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음.

<중장기 농업·농촌의 유지를 위해 중요한 정책>

단위: %(명)

구 분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후계농업인 육성	11.5(173)	13.6(111)	25.0(16)
농가소득 안정	43.8(657)	53.8(439)	21.9(14)
적극적인 귀농지원	9.8(147)	3.4(28)	1.6(1)
농촌과 도시의 교류 확대	11.9(178)	5.8(47)	6.3(4)
농촌지역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	14.3(214)	12.3(100)	21.9(14)
기술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6.5(98)	6.0(49)	12.5(8)
외부 자본의 농업분야 투자	1.7(25)	3.8(31)	7.8(5)
기타	0.1(2)	0.5(4)	3.1(2)
모름/무응답	0.4(6)	0.9(7)	-
합계	100.0(1,500)	100.0(816)	100.0(64)

- 재고쌀 문제 해소 대책으로는 ‘쌀소비 촉진과 가공용 공급확대’ (도시민 60.9%, 농업인 38.0%, 전문가 34.4%)를 꼽았음. 농업인과 전문가는 ‘사료작물 등 작목전환 유도해 생산량을 조절’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 31.7%, 23.4%로 나타났다.

<재고쌀 문제 해소대책에 대한 견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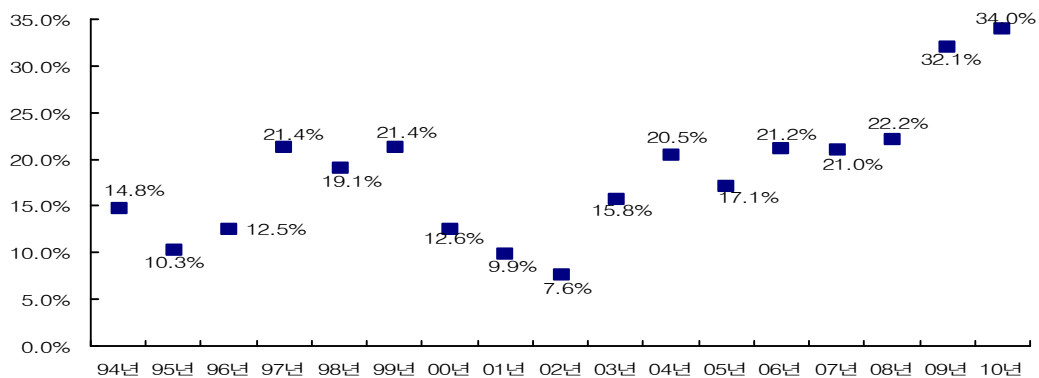
구 분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사료작물 등 작목전환 유도해 생산량 조절	15.1(227)	31.7(259)	23.4(15)
쌀 소비촉진과 가공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조절	60.9(913)	38.0(310)	34.4(22)
쌀 조기 관세화 수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	14.1(211)	7.5(61)	23.4(15)
대북 지원 등 원조용으로 소진	9.5(143)	19.1(156)	17.2(11)
기타/ 모름/무응답	0.4(6)	3.7(30)	1.6(1)
합계	100.0(1,500)	100.0(816)	100.0(64)

- 농림수산물식품부가 발표한 수확기 쌀값 및 쌀 수급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도시민 40.1%, 농업인 44.0%, 전문가 36.0%가 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 평가는 긍정평가의 절반 수준이었음.

3) 농업인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2009년 처음으로 만족도가 30%대(32.1%)에 진입한 이후 이번 2010년도 조사에서도 34.0%로 조사되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UR 이후 농업인 직업만족도 변화>



- 만족 요인으로는 '정년없이 일할 수 있다'(48.0%), '좋은 자연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23.0%), '도시근로자에 비해 스트레스가 적다'(17.4%) 등으로 조사되어 조기퇴직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도시근로자 직업환경이 농업 종사자의 직업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요인으로 추정되었음.
- 불만족 요인으로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47.9%),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18.2%),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15.2%),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불안'(14.8%) 등으로 나타남.
- 농촌 생활여건 만족도는 23.3%로 지난해보다는 23%p 낮아졌지만 2006년 16.5%, 2008년 22.7%였던 것에 비하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불만족 요인으로는 '도시에 비해 생활환경 열악'(35.6%), '의료시설 등 복지미흡'(22.8%)등이 불만족 요인의 과반수를 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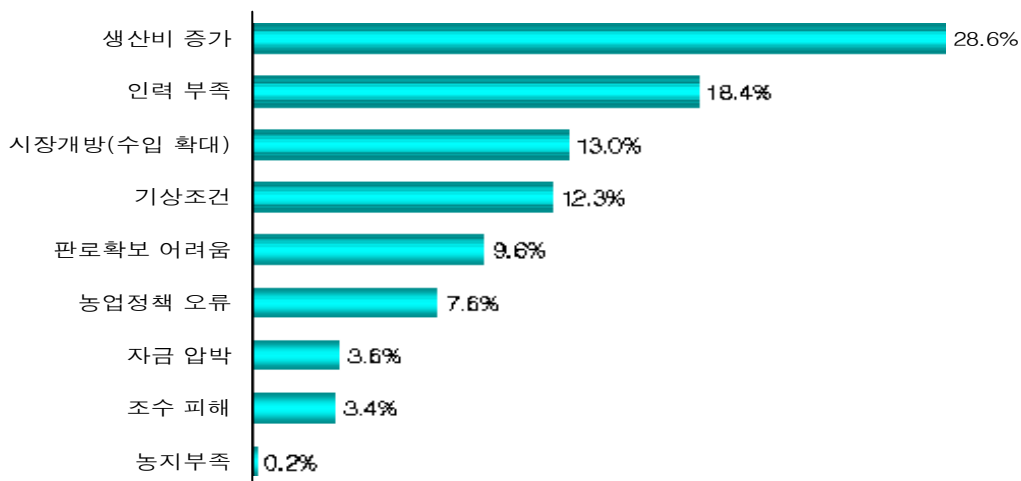
<농촌 생활여건 만족도(농업인)>

단위: 명, %

구 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만족한다	10	1.2	21	3.2	29	3.2	20	2.5
약간 만족한다	131	15.3	130	19.5	203	22.4	170	20.8
그저 그렇다	348	40.6	266	39.9	346	38.2	313	38.4
약간 불만이다	272	31.7	162	24.3	239	26.4	231	28.3
매우 불만이다	87	10.2	83	12.5	75	8.3	81	9.9
모름/무응답	9	1.1	4	0.6	14	1.6	1	0.1
합계	857	100.0	666	100.0	906	100.0	8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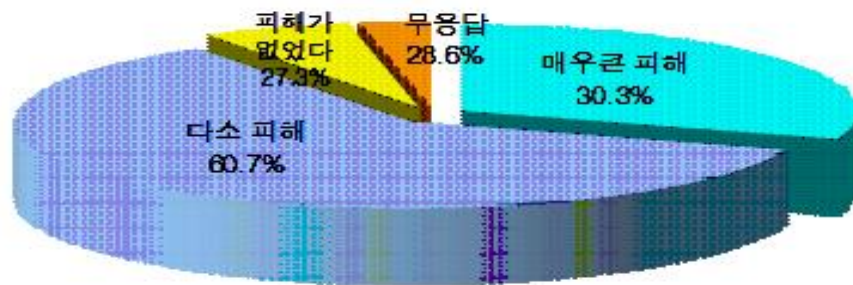
- 올해 농사만족도는 지난해(29.1%)보다 14.8%p나 낮아진 14.3%를 기록함으로써 농업인 10명당 8명 이상이 2010년 농사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만족 요인으로는 '소득감소'(44.5%), '나빠진 농사여건'(30.0%), '농산물 수입 증가'(10.8%)를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하였음.
- 농가의 가장 큰 경영위협 요인 '생산비 증가(28.6%)'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인력 부족'(18.4%), '시장개방(수입)(13.0%)', '기상조건(12.3%)'순으로 응답.

<농가의 가장 큰 경영위협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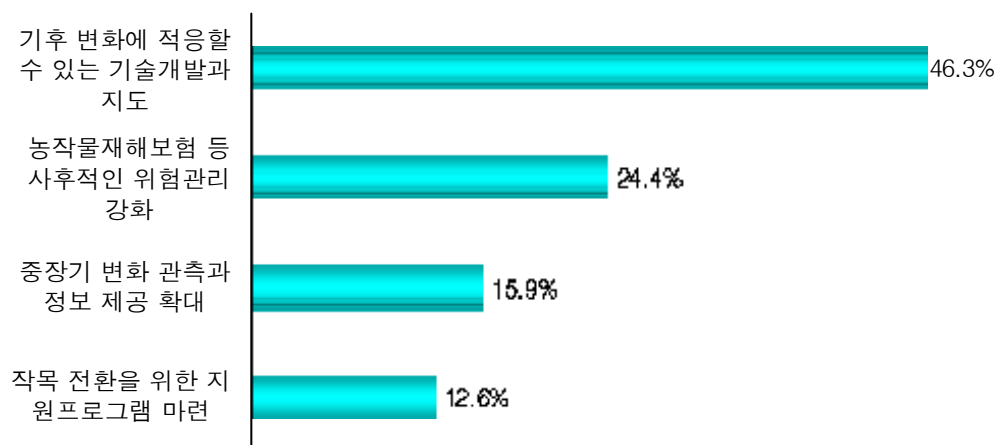
- 올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농가는 응답자의 91%로 이중 30.3%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함.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 피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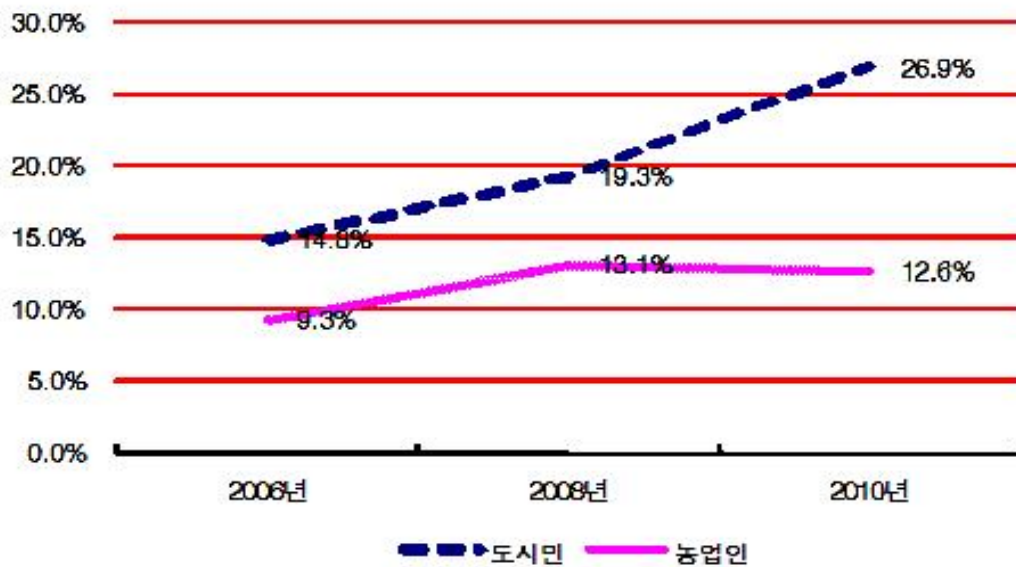
- 농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지도'를 가장많이(44.8%)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등 사후적인 위험관리 강화'를 꼽았음.

<농가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요소 인식>



- 농업인들은 '현재 거주 여건 만족' 36.7%, '삶의 질 수준 높다' 12.6%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도시민은 각 55.4%, 26.9%로 응답해 비교해 도-농 인식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농업인과 도시민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견해 차이>



- 농업인 중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3.6%로 2006년 조사결과(61.5%)보다 2.1%p 증가하였음. 자녀 및 가족들이 준비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으며, 본인과 자녀가 같이 준비한다는 농업인은 11.4%로 조사되었음.
- 사회보장제도에 전적으로 기대거나(6.6%) 아무런 준비도 없다는 (12.0%) 취약계층이 18.6%로 조사되었음.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주체>

단위: %(명)

구분	2006년	2010년
본인 스스로 마련	61.5(527)	63.6(519)
자녀 및 가족들이 준비	2.1(18)	2.0(16)
본인과 자녀, 가족들이 같이 준비	10.6(91)	11.4(93)
사회보장제도에 기대	7.9(68)	6.6(54)
아무런 준비도 기대도 없다	15.1(129)	12.0(98)
무응답/모름	2.9(24)	4.4(36)
합계	100.0(857)	100.0(816)

- 농업인들의 노후대책에 대한 준비 수준은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또는 충분한 편이라는 응답이 7.7%에 그쳤으며, 불충분(매우 또는 약간)하다는 응답이 과반수에 가까운 49.2%에 달했음.

<현재 노후대책 수준에 대한 인식>

